

여성고용 불안정 악화 우려

노동부가 마련한 '시간제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장에 관한 지침'이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여성고용 현실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라는 지적이 높게 일고 있다.

3일부터 시행중인 '시간제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장에 관한 지침'은 △주당 근로시간 30.8시간 미만의 시간제 근로자에게 유급생리·연월차·산전산후 휴가 등을 주지 않아도 되도록 했던 애초 원안을 수정해 주기로 했으나 △시간제 근로자보다는 사용자 입장에서 마련됐다고 여성계와 노동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런 여성계, 노동계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노동부가 8일 오후 여성개발원 국제회의장에서 마련한 '시간제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장에 관한 지침 설명회'는 노동부의 설명보다 여성단체 관계자들의 문제점 지적이 오히려 압도하는 자리였다.

이날 시간제 근로자 근로조건 보장 지침을 만든 노동부 근로기준과 하갑례 사무관이 "이 지침은 시간제 근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노·사 양쪽을 모두 배려한 것"이라고 말하자 참석한 여성들은 "사용자쪽 입장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이의를 제기했다.

노총 김령자 여성국장은 "현재 제조업 부문의 인력난은 근로조건이 열악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면서 "저임금, 장시간 노동의 근로조건이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인력난 타개책으로 시간제 근로를 도입하면 제조업

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여성민우회 김미숙 간사도 "노동부 지침이 시간제 근로자를 주당 근로시간 30.8시간 미만으로 규정하면서도 최고 56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적용기준을 정해 사용자가 정규직 근로자보다 적은 임금을 주면서 장시간 노동을 시킬 수 있는 법 테두리를 만들어놓은 꼴"이라고 비판했다.

산재·연장근무 대책 외면 노총 보호장치 마련 건의

한편 노총은 8일 노동부에 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법적·제도적 보호장치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보냈다. 한국여성단체연합(회장 이효제)은 "여성이 상당수 집중돼 있는 시간제 근로자, 임시직, 하청직 등은 여성고용 불안정과 연관돼 있는데 노동부가 시간제 근로 근로조건 지침만 마련한 것은 오히려 여성고용의 불안정 상태를 가속화시킬 것"이라면서 여연 산하 노동위원회와 24개 회원단체가 공동해 시간제 근로자로 일하면서 불이익을 받은 여성의 소송제기를 검토중이다.

김 국장은 또 노동부 지침은 △시간제 근로자가 산재를 당했을 때의 보호대책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11개월만 고용하고 해고했을 때의 시간제 근로자 보호대책 등 "사업장에서 실제로 일어날 문제에 대한 예방책은 거의 외면한 상태"라고 지적하고 "이번 사용자를 위한 근로조건 지침과 함께 근로자를 위한 고용조건 지침을 보완

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회장 이효제)은 "여성이 상당수 집중돼 있는 시간제 근로자, 임시직, 하청직 등은 여성고용 불안정과 연관돼 있는데 노동부가 시간제 근로 근로조건 지침만 마련한 것은 오히려 여성고용의 불안정 상태를 가속화시킬 것"이라면서 여연 산하 노동위원회와 24개 회원단체가 공동해 시간제 근로자로 일하면서 불이익을 받은 여성의 소송제기를 검토중이다.

〈신연숙 기자〉